

김의영 · 미우라 히로키 편, 『한중일 사회적 경제 Mapping』(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009), 진인진, 2015. 7.

김용호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 사회에서 아직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생소한 편이다. 최근 협동조합, 마을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런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조직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매우 선구적인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활동을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를 비롯한 학계의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해준 공로가 크다. 더욱이 한중일 3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을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비교하고, 또 유럽국가와 비교한 점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가진 이 책의 발간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 책이 학문과 실천의 측면에서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과 향후 연구과제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I. 이 책이 주목을 받는 이유:

계몽보다 분석의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를 연구

우리가 이 책을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오늘날 자본주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세계 자본주의 발전을 강력히 견

인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식 경제가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으나 아직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 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공황 일보 직전으로 몰고간 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이제 위력을 상실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 확대, 국가 주도의 자동차산업의 구조 조정 등을 포함한 전형적인 케인즈식 방식으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한 결과 미국 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각국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현상이나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보편적 가치를 버리고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근시안적 소탐대실의 길로 나가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이런 관점에서 과연 사회적 경제가 현행 자본주의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유럽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동아시아에서는 비교적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 책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 책은 한국, 중국, 일본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3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책은 사회적 경제에 관한 동아시아 3국의 특성과 유럽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광범위하게 실려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을 “개별 서비스 지향인가-지역공동체 지향인가(Y축=주요 서비스 대상), 그리고 자본 결합 지향인가-인적 결합 지향인가(X축=조직의 구성 원리)”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후 X-Y축을 따라 한중일 3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을 Mapping한 결과, 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3국의 조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교분석의 틀이 비교적 간결하지만 매우 체계적이고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후속 연구자들은 이 책을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 책을 주목하는 마지막 이유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를 과거의 계몽 위주에서 벗어나 학문적 논의의 단계로 업그레이드

(upgrade)시켜 주었기 때문이다.¹ 그동안 한국에서 이 분야의 저서들은 주로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의 사례보고가 많았고, 또 학자들의 저서도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이론이나 처방, 정책, 외국 사례 소개 등이었는데, 이 책은 실천적 담론에서 벗어나 학문적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한 선구적인 연구 업적서다.

II. 이 책의 성과와 새로운 발견: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의 국제적 비교연구의 초석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학문적 성과를 올렸다. 첫째, 과거 사회적 경제 연구가 주로 개별 국가의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책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 한중일 3국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을 거의 총망라한 결과 매우 포괄적인(comprehensive)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문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거의 모든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부록에서 한중일 3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원·연구기관을 별도로 제시했다. 특히 각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의 종류별로 연도별 증감을 그래프로 만들어 각 조직의 발전 추세를 시계열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자료의 제약으로 모든 조직을 동일한 기준으로 그래프를 만들지 못하고 시작 연도가 나라에 따라, 조직에 따라 1990년, 1996년, 1998년, 2000년, 2004년, 2007년, 2013년 등으로 다양하다. 이 그래프에서 시작 연도가 오래된 것은 그 조직의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책이 이처럼 한중일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3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둘째, 이 책은 사회적 경제의 개념화 작업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거의 모든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설득력 있게 정의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개념이 시민사

¹ 서평자가 국내에서 출판된 사회적 경제 관련 저서 20여 권을 조사해 보니 대부분의 저서가 활동 사례보고나 계몽용이었고, 순수한 분석을 담은 저서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회, 제3섹터, 비영리 등이 있는데 나라마다 이러한 개념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가치가 너무 다양하고, 소유 형태가 각양각색이며, 시장이나 국가와의 관계도 매우 복잡하고, 자율성을 비롯한 관리의 원칙이 크게 다르다.² 특히 최근 들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등장하거나 기존의 조직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 현실을 따라가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어디까지를 사회적 경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학자나 활동가에 따라 크게 다르다. 예를 들면 근본적인 문제, 즉 '사회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고,³ 또 최근에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후자가 사회적 책임(CSR)을 위한 경제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사회적 경제의 개념적 지평을 확대, 재구성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한중일 3국의 사회적 경제의 주체를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개념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 즉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개념(제3섹터, 비영리, 시민사회 등) 및 한중일 3국에서 사용되는 독자적인 개념에 속하는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독자적 개념의 경우 일본의 소셜 비즈니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중국의 경우 사회조직, 민간조직, 공익조직, 사회적 기업, 공민사회, 합작경제, 집체경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우선 세 가지 기준(민주성, 경제성, 사회성)에 따라 네 가지 조직 유형을 도출했다. 1)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세 가지 기준을 충족한 조직), 2) 예비 사회적 경제조직(적어도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 조직), 3) 기타 사회조직 I(기준 미달이지만 잠재력을 가진 조직), 4) 기타 사회조직 II(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보기 어려운 조직). 이러한 조직 유형에 따라 한중일 3국의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모든 조직을 분류했다. 그 결과 한중일 3국의 조직 유형의 분포가 달랐다. 한국의 경우 소규모의 다양한 '주요 사회적 경제조직(주요 조직)'에 비해 '예비 사회적 경제조직(예비 조직)'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다. 반면 중국은 약 100만 개 이상의 농민전업공사

² 이 책에서는 개념화가 어려운 이유로 1) 사회문제의 다양화, 심각화, 복잡화, 2) 각종 조직의 형태 및 방법의 진화, 3) 각국의 다양한 제도화를 들고 있다(pp.18-20).

³ 고동현·이재열·문명선·한솔 공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한울아카데미, 2016.

가 주요 조직을 차지하고 있고 예비조직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한편 조직의 절대 및 상대적(인구 만 명당 조직 규모) 규모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일본이 두 나라의 중간 수준이다.

그런데 이 연구의 핵심은 한중일 3국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3국 간의 비교 분석을 위해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조직을 X축(인적 결합-자본 결합)과 Y축(개별 서비스 지향-지역공동체 지향)을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의 지형도(map)를 만들었다. 이러한 개념화 내지 분석 틀이 사회적 경제 관련 각종 유사 조직에 대한 상세한 국제적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특정 국가의 개별 사례 중심의 기존 연구를 뛰어넘는 후속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은 한중일 3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의 지형도(map)를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동아시아 사회적 경제 조직 모델을 제시했다(p.262). 이를 토대로 지역 간 비교를 시도했는데, 동북아, 서유럽, 동유럽을 비교한 결과 협동조합이 동북아와 유럽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제회, 결사체, 재단 등에 대한 평가는 동북아와 유럽 간에, 그리고 동북아와 유럽 국가 간에 차이가 현저했다.

이 책의 마지막 학문적 성과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가 간 비교와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점이다. 이 책은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참여한 학제 간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참여가 없어 아쉬움이 크다. 사회적 경제 관련 다른 저서들을 보더라도 경제학자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도 주류경제학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보여 안타깝다. 그런데 이 책은 학제 간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참여한 국제적 연구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미우라 히로키(三浦大樹) 박사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 한중일 3국의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장차 동아시아의 학자들이 서구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중일 3국 학자들이 교류협력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연구 풍토를 광범위하게 조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III. 이 책에 대한 비판과 향후 과제: 사회적 경제의 활동 사례와 장래 연구 필요

2015년 7월, 이 책이 발간된 후 계몽 차원이 아닌 분석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를 연구한 저서들이 속속 발간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사회적 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김의영, 구양미, 권현익, 안도경, 안상훈, 이준동, 이옥연, 최인철, 한신갑 공저, 푸른길, 2016), 『한국 사회적 경제의 역사: 이론의 모색과 경험의 성찰』(김신양, 신명호, 김기섭, 김정원, 황덕순, 박승욱, 노대명 공저, 한올아카데미, 2016),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자본주의의 오래된 미래』(고동현, 이재열, 문명선, 한솔 공저, 한올아카데미, 2016) 등이 대표적인 저서들이다. 이들 저서가 사회적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들, 즉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 호혜와 협력의 경제는 가능한가 등을 고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경제의 발전 방향,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 모델의 가능성 등을 성찰하고 있어서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에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있고, 또 활동가들이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사회적 경제의 장래가 매우 밝은 편이다.⁴ 이러한 최근 사정을 감안하여 이 분야의 향후 연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책을 좀 더 비판적으로 조명해 보자.

첫째, 이 책이 한중일 3국에서 사회적 경제의 등장과 발전 과정을 먼저 설명한 후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의 관련성을 분석했다라면 독자들의 이해가 빠르고 또 읽기가 지루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가 아직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왜 등장했는지, 그동안 어떻게 진화 발전되어오고 있는지, 각국의 활동가들과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제도적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을 분석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친절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 책의 결론 부분에 있는 “3. 제도적 개혁의 시기와 연속성”(pp.273-275)의 내용을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다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⁴ “사회적 경제 일자리, 일과 가정 모두 살린다,” 『한겨레』, 2017년 1월 5일자. 20면.

것이다. 물론 이 책의 초점이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조직이 등장한 배경과 진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필자의 분석 틀에 너무 끼워 맞추어 설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게 된다.

또 한중일 3국의 사회적 경제의 등장과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도 너무 간략하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도식적이어서 다른 저서나 논문을 참고로 읽어보지 않는 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한중일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 과정에 대한 분석이 풍부하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향후 사회적 경제의 장래를 전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자체적으로 거의 완결에 가까운 연구를 했지만 앞으로 후속 연구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실제 활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과 법제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p.193). 이 책의 일본 연구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맥락을 드러낼 수 있는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다”(p.250). 특히 각국의 현지조사, 활동가와 관련 정부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 책의 분석 틀을 사용하여 동일국가 내에서 여러 다른 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의 특징을 파악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한 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현장 조사를 통해 분석해 보면 이 연구의 분석 틀의 유용성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 단위의 거시적 차원에서 만든 분석 틀이 동일 국가 내 지역 차원의 비교 분석에도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 이 연구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 책은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을 분석했기 때문에 정태적, “평면적”일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규명해야 “입체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p.250). 이 책의 결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앞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 다양한 사업 모델, 활동방식, 사회적 기업가 정신, 지역 차원의 시스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연구가 뒷받침될 때 향후 실천적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자신 있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의 인지도에

대한 비교 분석에 있어서 한중일과 유럽 국가를 비교하면서 설명의 부족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된다. 각국의 사회적 경제 인지도를 비교해 보면 동아시아는 동유럽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동유럽의 사회적 경제 인지도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p.255). 또 한국은 아일랜드나 이탈리아의 상황과 유사하고 중국과 일본은 체코나 헝가리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일랜드,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의 사회적 경제 인지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넷째,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사회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경제의 네트워크화로 자원배분과 경제활동에서 호혜성의 원리가 부활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는데,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혁명, 그리고 인공지능시대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제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우버, 에어비엔비, 카카오택시, 자율주행자동차 사업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공유경제나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가 사회적 경제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예리하게 파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앞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성에 못지않게 경제성을 강조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적 경제가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의 대안이 되려면 경제학자들이 앞장서야 가능해질 것이다. 아마 경제학자들은 사회적 경제가 주류 경제학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다. 더욱이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와 경제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개인의 삶은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가치의 실현 없이 경제적 가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제도주의 경제학이 강조하는 경제활동의 비경제적 요인, 즉 신뢰, 사회적 자본, 협동, 호혜, 공정성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기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이해와 연구가 절실하다. 앞으로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구적 자본주의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길이 아닐까?